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백세 시대의 바이오 헬스케어

김 민 규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장수가 보통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백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생긴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국제연합(UN)이 2009년에 작성한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보고서'에서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100세 이상의 장수가 보편화하는 시대를 지칭하면서 만들어졌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6개국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 또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비용 대비 효율적인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헬스케어보다 더욱 효율적인 모델을 필요로 하게 됐고 건강에 대한 예방적 개입, 맞춤형 의료시스템과 노후 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성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의 기술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후성유전체, 줄기세포, 유전체 치료, 개인 맞춤형 치료제 등이 키워드로 등장하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치료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혁신 제품 및 서비스의 트렌드에 맞추어 대중의 관심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충족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맞춤형 치료 기술은 인간 유전체 정보의 접근성 확대로 질병과 관련 있는 유전자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치료(Cure) 중심에서 개별화된 헬스케어·예방(Care·Prevention)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는 가족(모친)의 유전력에 의한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쪽 유방 절제 수술을 감행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병률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와 개인의 유전정보를 분석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기술의 적용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전자 분석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전 세계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정밀의료 시장 형성이 대세일 것이다. 정밀의료 시장의 핵심은 개인 관련 유전체 정보와 임상·건강 정보 등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과 협의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개선해 의료·산업적 활용을 통한 복지와 경제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신산업 창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따라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확대를 위해 아시아와 개발도상국 등 신흥 시장 진출 확대와 융합 신산업 초기 시장 형성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바이오와 헬스를 융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융합 신산업의 주체인 대학, 기업, 병원 등이 초기 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및 보완 장치를 균형있게 조정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시스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 기업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과감한 투자, 병원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 자료 확보와 정부의 규제 장벽 완화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성숙해지고 있는 산업 여건 상황에서 정부와 연구기관 및 민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 산업 생태 체계 조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기 고

지방분권,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김 성 환
광주 동구청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다원화사회다. 지역, 연령, 성별, 계층별로 국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러한 다원화 흐름의 진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원화사회에서 과거 정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적 국가형태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하면서 바야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대시키는 분권의 시대가 열릴지 기대되고 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러한 분위기가 반갑지 않을 리가 없다. 지자체가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충분한 자치재정권을 갖는다면 분명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그러한 권한을 받아 충분하고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힘, 즉 자치역량을 길러야 한다.

자치역량을 기르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주민참여'의 생활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지방분권화가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자 또 다른 권력 덩어리가 생길 뿐이다.

주민참여는 대의제도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행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참여는 익숙지 않은 경험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지난해 4월 동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주민들이 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13개동을 순회하는 '주민과의 대화'다.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막혔던 보가 터지듯 수많은 정책 제안과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종합해보면 주민들이 어떤 정책과 행정을 원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연 1회 개최되던 주민과의 대화를 연 2회로 늘리기로 하고 참여대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마을활동가, 사회적 경제조직 등으로 넓혔다. 또 5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문제를 토의하며 개선점을 찾고 해결해가는 '마을의제 토의'를 새롭게 도입했다.

마을의제 토의가 동구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터라 걱정도 됐지만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주민들은 산책로 정비, 대학가 쓰레기 문제, 안전 골목길 조성, 주민공동체 결성 등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을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토의에 임했다.

또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시대에 '동구 두드림' 모바일 앱을 개설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도 자치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구에서는 '동구 두드림'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어디서든 구청장과 대화할 수 있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들은 구정 주요사업에 댓글로 의사를 표현하고, 쓰레기 처리 등 단순 민원부터 도시계획과 같은 주요정책까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또 정책투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 두드림이 구청과 주민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며 참여와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안전사각지대를 지키는 '여성안전지킴이', 인권시책을 제안하고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는 '인권길라잡이단', 지역 어르신들의 역량을 마을 발전에 활용하는 '실버 리더자' 등을 새로 구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이처럼 동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해 구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들이 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지방분권화를 앞당기는데도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종교칼럼

마밀라피나타파이(Mamihlapinatapai)

장 형 규
원불교 사무국장

15세기 스페인제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얻으며 초강대국의 번영을 누린 나라다. 스페인 제국의 몰락은 무적함대의 패배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압도적인 스페인 무적함대가 약한 영국 해군에게 패배한 이유는 오만함과 조급함 때문이었다. 영국 해군이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야금야금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 펠리페 2세는 "이길 수 있다"라는 오만함으로 전쟁을 서둘렀다.

당시 신하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스페인 펠리페 2세는 당장 영국을 함락시키라고 지시한다. 미처 건조되지 않은 목재로 만든 물통을 싣고 말이다. 결국 얼마 못 가 물통이 썩기 시작했고 안에 든 물이 썩으면서 선원들은 병에 걸리고 만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국 해군에게 대패한다.

요즈음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에 대한 제재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건군 90주년 기념식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선제타격론'이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하고 미국 자체 판단으로 핵 위험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의 지형은 이미 중·러·북과 한·미·일로 양분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2015년 12월 북한의 모란봉악단 공연이 취소된 적이 있다. 공연 중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장면이 대형화면에 등장한 것을 보고 중국이 빼달라고 한 것을 북한이 거부해 발생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차였다. 중국과 북한과의 거리가 생긴 것은 우리에게는 천운이었으나 올 1월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 결별은 불가'라며 북한을 껴안았다.

어쩌면 우리에게 스페인 해군의 물통이 바로 '사드'였지 않을까. 왜 그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지금도 참으로 안타깝다. 만약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북핵 미사일에 대한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북한도 지금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 제자 중 율라투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수강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율라투스에게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면 수강료를 내라는 조건을 걸고 가르쳤다. 그 후 프로타고라스는 율라투스에게 수강료를 내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말하길 "자네는 어쨌든 수강료를 내게 되어 있네. 소송에서 진다면 법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고, 이긴다면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하네"라고 하자 제자 율라투스는 "저는 어쨌든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에서 진다면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긴다면 법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맞선다.

이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역딜레마로써 극복한 사례다. 우리가 미국·일본과 함께 하면 중국·러시아와 적이 되고, 중국·러시아와 대화하면 미국·일본의 협력이 약화하는 상황이다.

칠레 남부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의 원주민 언어인 야간(Yaghan)어에서 유래한 '마밀라피나타파이(Mamihlapinatapai)'라는 단어가 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자신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상대방이 자원하여 해주기를 바라며 보내는 눈빛이라는 의미다. 미국 트럼프도 중국의 시진핑도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또 다른 채널에서는 무언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은 사드를 임시 배치하는 것보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접촉하여 실마리를 찾아 해결 당사자인 그들이 대화테이블에서 만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 시국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역딜레마 해법으로 강(強)대 강(強)이 아닌 화(和)와 유(柔)로써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社 說

국민의당의 앞길 호남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어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을 살려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의 직간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당권 도전은 책임정치에 어긋난다며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국민의당이 내홍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8·27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의당은 몹시 어렵다.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처한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면서 다당제 정치 유지를 위해서라도 당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김종회·장병완·정인화·조배숙·주승용·황주홍 등 당내 12명의 의원은 "제보 조작 사건에 지도부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으로 대선 패배 책임이 덮어지고 정치 복귀 명분이 생기지는 않는다. 책임 정치의 실현을 위해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한다"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안 전 대표의 출마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엇갈린다. 안 전 대표는 우선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당권에 도전한 정동영·천정배 의원과도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전당대회 후에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말 그대로 대권 욕심이 아닌 광주·전남이 만들어 준 국민의당 회생에 모든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기약 없이 표류하는 헌법재판소장 인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본회의 상정 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 후보자는 현재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인준안 표결 여부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맞물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세인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 더욱이 지난 7월 국회에서는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여부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추경안 통과에 즈음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 돌파구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헌재소장 공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헌재가 '8인 체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이선애 재판관 임명으로 가까스로 기능 정지 위기(7인 체제)에서는 벗어났지만 8인 체제 역시 5대 3으로 위헌 의견이 많아도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등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주요 사건들을 심판대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정이 미뤄지는 사건은 나날이 쌓여 현재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은 57건에 이른다. 여기에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수록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는 16일부터 결산국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는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석 사태를 조속히 막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파경의 비용

지난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호텔신라 사장) 씨가 샐러리맨 임우재(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씨와 결혼하자 호사가들은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은 이혼소송에서 결별 판결을 받았다.

재벌가의 파경이야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이혼 재판에서 불거진 돈 문제가 눈길을 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는 최근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삼성 저격수'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도 칼날을 곧추세웠다. "이 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스스로 '편법 상속'을 인정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혼 재판에서는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의 경우 두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금액이 정해진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분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성격이다. 이 사장이 재판부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1조7046억 원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이 사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눈길이 쏠리는데 아쉽게도 세무당국과 검찰이 박 의원의 주장을 주목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삼성가(家) 2세의 이혼은 지난 2009년에도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의 딸 임세령 씨의 결별이다. 임 씨가 재판부에 이혼과 재산 분할 신청을 냈지만 양측이 합의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위자료 액수는 묻혀 버렸다. 양심선언을 통해 삼성 비자금과 내부 비리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라는 제목의 책에 이렇게 썼다. "이재용과 임세령이 재산을 놓고 다투는 모양은 좀 우습다. 결국, 훔친 재산을 서로 챙기겠다고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용의 재산 가운데 대부분은 회사로부터 빼돌린 장물이다."

'흙수저'들은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씁쓸하다. '세금과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 중에 세금의 경우 부자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다. 부자들은 법도 잘 빠져나간다. 전 재산의 95%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을 한국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가. 법 잘 지키고 세금 제대로 내는 부자를 만나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